

정운천 · 김광수 도당위원장 행보 주목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운천, 새만금 예산 확보 ·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 합의... 김광수, 예결위원 · 복지위 간사 · 간담회 · 법안 발의

새누리당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전주)과 국민의당 전북도당 김광수 위원장(전주)은 올해 4.13 총선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이다.

여당출신 정운천 의원은 야당 텃밭인 전북에서 30여년만에 당선과 변화의 물꼬를 텃고, 김광수 의원은 기초의원부터 차근차근 밟아 오다가 도의회 의장을 마지막으로 중앙 무대에 진출했다.

특히 두 의원은 도당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중앙당과 지역도당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먼저 새누리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정 의원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 텃밭에서 끊임없이 대립, 선출직 3수 끝에 당선된 정 의원은 야당의원 10명 몫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로 그는 최근 전북에서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주광덕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북에서 개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산 반영도 그의 몫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새만금 남북 2축 도로 예산 314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여기에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 합의'를 통해 새만금 장기 발전을 위한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관철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운천 의원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은 '전북 지역 정치를 일으키는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과 광역의원을 거쳐 지역 현안과 경제 사정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전문가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역할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무래도 중진의원인 많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내에서 '도민과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초선으로선 드물게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는 진지하면서 열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선된 이후 간담회와 법안발의 등 쉬지 않고 달려왔다.

실제로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 영유아 건강증진 개정안 발의, 저출산 극복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의 1호 법안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의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당선된 이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그가 움직일수록 지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게 전북은 차기 대선의 최대 승부처다.

지금까지 발로 뛰며 현안해결에 전념하는 이들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느 누가 우세하다고 짐작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신광영 기자

안철수 호남방문... 전대 재뿌리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을 방문기로 해 눈길을 끈다. 안 전 대표는 더민주 전대가 열리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광주 등 호남을 방문한다.

안 전 대표는 27일 광양에서의 강연에 이어 광주에서 광주·전남 의원 및 지역위원장과의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이들과 무등산을 등반한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호남에서의 지지를 부진 현상을 겪고 있는 안 전 대표가 민심 회복 차원에서 1박2일간 방문을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묘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분위기다. 하필이면 더민주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야권의 심장인 호남을 방문하느냐 하는 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더민주의 축제일인 전당대회에 새로운 대표가 뽑히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을 다소간 희석시키기 위해 호남 방문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일종의 '재뿌리기' 차원이라, 더민주 견제용이란 분석이다.

물론 안 전 대표 측은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자연스럽게 더민주 전대 일정과 맞물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대표 외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시기에 호남을 방문해 순회규 전 더민주 고문과 회동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더욱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더민주 전대 당일인 27일 순 전 고문과 전남 목포에서 만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순 전 고문을 향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회동이라 둘 간의 만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일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분들(순 전 고문·정운천)이 아직 (합류)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27일 열리는 더민주의 전대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순 전 고문의 합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관계자는 뉴스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에서 과거 우리 일정에 따라 움직였던 사례가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더민주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뉴스

“레임덕 국민 지지 속에서 방지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요구를 거부하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국민의 지지가 떠나가는데 의혹투성이 총성형 인사들로 자기 주변을 채운다고 해서 레임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충고한다"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귀가 있다면 들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레임덕은 권력기관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강한 지지 속에서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신분을 숨겨서 오늘날 경찰청장 자리까지 올랐다. 의혹투성이 인사들로 청와대와 사정기관을 채울 것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뉴스



더민주 당대표 TV 토론회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TV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왼쪽부터), 김상곤, 추미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은 몸조심하는데... 전대에선 '문' 만 난무

추미애 문심잡기에 김상곤·이종걸 '호문·도문' 공세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5일 친문·반문은 물론 호문·도문까지 온갖 종류의 '문(文)'으로 도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작 전당대회에 개인하지 않겠다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후보들이 앞장서 '문'을 외치며 피치 못하게 후보 간 혈투의 중심에 서게 된 모습이다.

'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은 당대표 경선이다. 먼저 추미애 후보가 선두에서 문심잡기를 위한 '친문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 후보는 특히 "1등 후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노골적으로 문 전 대표를 공식 대선주자라고 하고 있다. 추 후보는 MBC 시사프로그램 '백분토론' 출연 당시, "1등 후보가 좌절하는 모습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이고 싶지는, 그게 역동적 경선이나"며 문 전 대표를 비호했다.

김상곤 후보는 이에 맞서 '호문(문재인 호가호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다. 김 후보는 "문 전 대표를 호가호위한다는 '호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는 모두 문 전

대표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 추 후보가 문 전 대표를 돕는 게 아니라 표 획득에 이용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이종걸 후보는 여기에 '도문(도로 문재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더민주가 친문 일색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경우 '도로 문재인, 도로 친문당'이 되면서 호남 지지를 영영 잃고 대선 승리도 요원해진다는 논리다.

당대표 후보들이 이처럼 온갖 종류의 '문'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자연스레 전당대회 초점도 친문이나 아니냐, 또는 친문 이 지도부가 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로 옮겨간다는 분석이다. 결국 전당대회가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아닌 계파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대표 후보들이 문 전 대표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선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러나 "문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 한 더민주 관계자는 "시도당위원장 경선만 봐도 친노·친문 싸움이 끊이지 않으니"며 "온라인

에선 친문 지지자들이 당선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돌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선거도 문심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특히 문 전 대표가 4·13 총선 과정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온라인 권리당원 중심의 친문 지지자 표심을 꽉 잡고 있다. SNS에선 추미애·양향자·김병관 후보를 묶어 '추·양·관'으로 칭하며 짝짓기 투표를 추진하는 모습도 두드러진다.

여성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는 문 전 대표의 영입인사로 총선에서 천정배 전 공동대표와 맞붙어 나선,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절박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문 전 대표의 영입인사인 손혜원 의원이 양 후보 라이벌인 유은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영입인사'를 지지하는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손 의원을 성토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다.

청년최고위원 부문에 출마한 김병관 후보 역시 문 전 대표의 영입인사로 온라인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김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 등 파동이 일었던 당시 김종인 비대위 멤버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친문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뉴스

당정청 "이달 안에 추경안 꼭 처리돼야"

당정청은 25일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정현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추경이 30여일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은 오직 조순·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628,000여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요청했는데 정쟁에 발이 묶여 안타깝다"며 "조금 늦었지만 추석 전에 돈이 풀려서 해안이 풀이갈 수 있도록 꼭 이번달 내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각종 민생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경제활성화법,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현

정부 내에서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물법 등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체불입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은 또 전날 긴급현안점검 회의에서 논의한 가뭄·복조·적조 현상 피해, 집단식중독 사태, 대패라 및 C형 간염 등과 관련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뉴스

“조운선, 1년간 생활비가 5억원”

더민주, 조운선·김재수 장관 후보자 검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검증 공세에 들어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들을 검증한 것이기에, 우 수석을 향한 공세의 칼날을 겨누는 셈이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총 소비액은 18억3,000만원으로 매년 5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운을 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2013년 6,000만원, 2014년 5,000만원, 2015년은 신고도 하지 않았고 배우자는 1억2,000만원이다. 부부를 합하면 (총 소비 18억3,000만원 중) 2억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과도한 것도 문제고, 특히 신용카드 신용액이 극히 적다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5억원을 소비한 것도 너무 과도하고, 여기에 현금으로만 3년8개월간 16억원을 썼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해운관련 업체로부터 부동산 특혜를 받고 농협은행의 해운업 부실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용인 소재 93평 아파트에서 계약갱신 없이 1억9,000만원에 거주했다.

아파트 집주인은 해운중개업체인 J기업이다. J기업은 창업초기 벌크선사인 C기업이 벌크선 중개물량을 몰아줘 성장한 업체다. C기업은 현재 법정관리아 들어간 상황이며 농식품부 소관 농협은행이 C기업에 4,032억원의 대출을 해줘 부실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농협은행이 C기업에 2,500억원의 대출을 해준 시점이 후보자가 C기업과 특수관계인 J기업이 집주인인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인 2007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농협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농림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관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J기업은 후보자에게 부동산 특혜를 주고, 김 후보자는 J기업과 특수관계인 C기업에 농협은행이 부실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그것도 7년간 전세금 인상 없이 산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93평 아파트를 1억9,000만원 전세금에 7년간 변동없이 사는 게 과연 우리 서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면서 "또 1년간 생활비가 5억원이었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돈을 뿌리고 살아도 5억원은 다 못쓸 거 같다"고 꼬집었다. /뉴스

세월호 유가족·백남기 대책위, 더민주 당사 점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백남기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당사 점거에 나서자, 곤혹스런 표정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백남기대책위 소속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더민주 당사 5층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5층 라운지 곳곳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라', '무조건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등의 피켓이 곳곳에 붙었다.

이들은 지난 5월31일과 8월3일,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특별법 개정과 청문회 논의가 진척이 없는 데 대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의 핑계만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는데, 이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후 새롭게 출범할 당 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선체조사보장 등에 대한 확답을 내놓을 때까지 단식농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특검단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의 합의가 없이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더민주를 난처하게 하는 요소다.

원내 관계자는 "마음은 다 통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두고 서로 꼬인 게 약간 있는 것 같다"며 "그들도 원내대표의 뜻을 다 알고 있다. 계속 있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도 두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민심을 달랬다.

김상곤 캠프 측 김현산 대변인은 성명에서 "당대표가 돼 바로 당사 농성장을 방문하겠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남기 청문회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걸 캠프 측 김기춘 대변인도 "세월호 특별법이 백남기 청문회는 사실상 우리 당론이고 의미가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일 아니냐"며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캠프 측 김광진 대변인도 "이에 대한 당론이 변경된 적이 없고 당론으로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 당선 이후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게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